

文대통령 “극동 개발은 북핵 해결법”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 시너지 기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 놓아 협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변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며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아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산업으로 제시됐다. /뉴시스



“저도 입장하고 싶어요” 7일 전북도청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만석으로 입장할 수 없게 되자 일부 남성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김관영, 신촌마을 인입철도 교량화 사업비 반영

철도 건설로 분단·고립 위기에 놓였던 신촌마을의 숙원이 해소된다.

7일 국회 김관영 의원실은 기재부로부터 군장산단인입철도 총사업비 심의 결과 증액 결정이 났으며, 이 과정에서 신촌마을 구간의 교량화가 반영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하게 진행되어온 ‘신촌마을 지키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는 군산 신관동 신촌마을은 군장산단인입철도의 경로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사업의 희생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공사 착공으로 가시화 되자 집단 민원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 첫해인 지난 2012년 첫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군산 신촌마을 문제 해소를 강력하게 요구, 당시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답변을 끌어낸 이후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린 바 있다.

이후 공단 이사장의 교체 등의 부침에 따라 답보 상태에 빠졌던 신촌마을 교량화는 2016년 격변하였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정과 지속적인 김 의원의 대정부 활동을 통해 일부 구간 교량화를 포함한 사업안을 수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순항이 예상됐으나 총사업비 조정이라는 압초에 걸려 2017년 예산 확보를 안타깝게 실패한 바 있다.

연말 예산 국회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한 김 의원은 2018년도 예산 확보의 첫 단추인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 심의 통과를 위해 년초부터 세종시 관가를 수차례 방문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늘날 패거리를 울릴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개발지역 원주민이 개발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지역개발의 주체로 참여하고 이익은 공유하는 시대가 참 개발 시대”라고 말하며 이번 심의 결과의 소화에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도교육청 제2회 추경 심사 돌입

예결특위, 11일부터... 3조1801억원 규모 961억원 3.1%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3조 1,801억 원(기정대비 961억 원 증가, 3.1% ↑) 규모로 지난 8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2017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재원 확보의 후속조치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사업을 통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력신장 기반 조성,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편성방

향의 타당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한 적정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절차적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전북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화,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최영일 위원장(순창)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추경예산을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새로 구성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마치면 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심사 경험과 지역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11월에 있을 2018년도 전북도 및 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 정리 추경안 심사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국정과제 TF, 차질없는 추진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7일 '10대 핵심 국정과제 TF(대책반)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차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다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대 핵심 국정과제 TF'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적시에 시행돼 성과를 낼 때 우리나라가 돼 가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10대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미래, 촛불로 합속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최저임금, 건강보험, 주거 등의 대책을 관리하고 공정과제, 공교육, 에너지정책을 주도하는 동시에 촛불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권력기관의 개혁, 언론

공정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의 포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TF별 계획을 공유하고 전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할 10개 TF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10개 TF는 ▲회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단장 박광온·간사 권철승)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박재호·김해영)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유은혜·오영훈) ▲통신투입(변재일·고용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진선미·소병훈) ▲언론공공성 실현(신경민·이재정) ▲공정과제 실현(윤호중·김종민)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민홍철·안호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전혜숙·기동민) ▲권력기관개혁 등이다. 단 권력기관개혁TF는 당 적폐청산위원회로 대체기로 했다. /뉴시스

이혜훈, 대표 취임 74일만 불명에 퇴진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7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7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26일 열린 정당대회에서 바른정당 첫 선출직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 대표는 보수정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여성 선출직 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 대표는 취임 초기 낮은 지지율 극복과 당의 화합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전국 곳곳을 누비며 당 홍보와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자강론과 통합론, 연대론 등이 분출할 때에도 자강론을 굳건히 지키며 소속 의원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사법부 A씨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바른정당이 깨끗한 보수, 개혁 보수를 외치며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해 온 만큼 이 대표의 비리 의혹은 개인의 도덕성은 물론 바른정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후 일부 청년 당원들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결국 자신의 비리 의혹이 당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다른 정당이 바른정당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시스